

보도설명자료 (‘20. 4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기업들의
요청에 따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, 재생
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온실가스
감축에 기여할 계획임 (한겨레 4.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
없으며,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
인바 온실가스를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◇ 4.27일 한겨레 <산업부 녹색요금제, 온실가스 되레 늘린다?>
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
전기 소비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간주해 탄소배출권을 주는
방안을 추진해 논란
 -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
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 확대로 연결될 우려가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구입 실적을
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,
 -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
구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
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

- 다만, 녹색요금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
재투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녹색요금제가
온실가스를 되레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※ 문의 :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(5360), 장민재 사무관(5363)